

현장과 시각

국회, 집단퇴장 재연되나



박지경

서울취재팀 차장

지난 2004년 10월25일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연설 전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총리를 찾아왔다. 수일 전 이 총리가 독일 베를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뒤보한다" "한나라당이 나쁜 건 세상이 다 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총리는 사과를 거부했다.

이 총리가 단상에 오르자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총리, 술깨셨습니까" "베를린 발언 사과하세요" "너무 오만한 것 아닙니까" 등 황의성 발언이 잇따랐다. 이 총리는 이에 어랑곳하지 않고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 90여명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선봉장은 현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이었다. 이들은 당 지도부에 '시정연설 보이콧'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그런데 3년 9개월이 흐른 국회에서 또 다시 이 같은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11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제18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에서 '황의역선'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민석, 강기정 등 폭행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세숙 의원을 비롯해 김재운·김재국·김상희·박선숙 의원 등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히 사죄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청와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04년 10월의 경우처럼 당 차원보다는 개별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물론, 국회 개원식이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어서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jkpark@kwangju.co.kr



10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다오위타이에서 개막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우디웨이 중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6자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核 검증·北 지원 방안 집중 논의

북핵 6자회담 개막... 북-미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원칙 합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0일 오후 4시(현지시간)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회담을 열고 북한이 지난달 제출한 핵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가국들은 작년 '10·3합의' 채택 이후 9개월 여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담에서 검증에 대한 기본원칙 등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한 뒤 구체적인 사항은 곧바로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평가와 함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하면서 향후 검증체계 수립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측이 관심을 보이는 경제·에너지 지원 방안과 일본의 참여 문제 등도 다뤄야 할 의제"라고 말했다.

회담 소식통은 "수석대표 회담은 사흘로 예정돼 있으며 비핵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회의도 수석대표회담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국은 회담 개막에 앞서 8~9일 활발한 양자접촉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도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담 등 참가

국 간 사전협의가 개막 전에 예정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석대표가 오는 대로 한·미·일 3자회담을 열어 북미-한미-남북간 양자회담 결과를 일본 측에 설명해주고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일본 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담 소식통은 다만 "검증을 위한 장비 반입 여부와 현장방문 사전 고지기간, 검증주체와 기간, 비용분담 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해 최종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참가국들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6자회담 차원의 평가 등을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하지만 신고서 내용에 대해 '완

전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검증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검증단의 영변 현장 방문과 북한 핵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검증을 위한 추가서류 제공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소식통은 "검증을 위한 장비 반입 여부와 현장방문 사전 고지기간, 검증주체와 기간, 비용분담 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해 최종 합의에 이를 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참가국들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6자회담 차원의 평가 등을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에 성 김 한국과장 임명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할 대북 특사에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승진, 내정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성 김 과장은 곧 대북 협상특사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한국과장은 커트 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담당 보좌관이 맡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이날

밝혔다. 유리 김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이미 7월부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의회에 파견되었던 에릭 리처드슨이 배치되는 등 국무부 한반도 담당 관리들이 상당 수 자리를 바꿨다.

이건희 前회장 징역 7년 구형

특검, 벌금 3,500억원... 이학수·김인주 징역 5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 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 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같은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라며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앞만 보고 멀리 보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데만 신경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가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전부 고쳐서 바로잡을 것이고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 연합뉴스

"청와대, 의혹 확산시킨 저의 뭐냐"

노 전 대통령측 '기록물 반출 논란' 강한 반격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10일 국가기록물 무단반출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주장에 전면 대응하면서 반격의 강도를 높였다.

노 전 대통령측은 청와대가 비실명 브리핑을 통해 의혹의 그늘에 숨어 각종 의혹을 언론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안된다. 최소한 품위를 지켜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가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봉하마을로 옮겨갔다.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기록물에 기록물 이관작업을 끝낸 후인

2월말 퇴임 직전 하드 디스크를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기록물을 반출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동원했다며 청와대가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 왜 언론에 대고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언론에 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봉하마을에 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대변인이 정식으로 나와서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전 청와대 측에 대해 "청와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언론에 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봉하마을에 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대변인이 정식으로 나와서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승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승영에 맡겨라!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4시/6시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변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산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을 나누는 상조입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을 나누는 상조입니다.